

# 사회복지 주간 동향(23.9.25.~9.29.)

## 1. 용인시 정책 동향

###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상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 \*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은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노석환)가 지난 2일 구갈레스피아 공원에서 열린 지식문화제에 참석한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6일 밝힘
  -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사장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제보의 중요성을 알림
    - 노석환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체 활동을 통해 제도를 알지 못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함
    - 등 관계자는 “협의체 활동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동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상하동 맞춤형복지팀)

##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남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쓰레기 더미에서 생활해 온 주민에게 도움의 손길 내밀어

< 주거환경 개선 사업 '행복한 클린 하우스' 진행...복지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도 이어져 >



\*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이 처인무한돌봄네트워크팀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행복한 클린 (Clean) 하우스'를 진행했다고 6일 밝힘

- 이번에 읍의 도움을 받은 주민 A씨는 지체·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음, 더욱이 A씨의 생활을 도왔던 모친이 지난해 사망해 청소도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가 집안 곳곳에 쌓였고, 식기들에는 음식물이 방치되는 등 생활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었음
- 읍은 그동안 A씨를 돕기 위해 여러 차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권유했지만 거부당함, 하지만 올해 여름 쥐의 사체가 그대로 방치돼 A씨의 건강 악화를 우려한 읍은 설득작업을 벌여 동의를 얻어냄
- 읍은 부패 정도가 심해 사용할 수 없는 가구와 쓰레기를 정리하고 쥐가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을 막는 등 청소와 방역 작업을 진행함
- A씨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다. 처인구 장애인복지관은 A씨의 식사와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과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청소 후에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할 예정
- 청소가 끝난 집을 본 A씨는 “쓰레기가 가득했던 집이 마치 새집같다”며 만족감을 나타냄
- 읍 관계자는 “A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남사읍 맞춤형복지팀)

### 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진행



- \* 용인특례시 처인구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복지 사각지대 없는 중앙동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함
    - 캠페인은 폭우와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행정복지센터 공직자들은 주민 접근성이 좋은 병의원과 편의점, 미용실 등의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홍보 물품과 복지서비스 안내문을 전달함
    - 동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상생하는 지역사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중앙동 맞춤형복지팀)

#### 4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동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 \*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1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1일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힘
    -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복지사각지대 캠페인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외 용인특례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인 ‘이웃지킴이’로 활동하는 통장,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체육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자 등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함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날 유동 인구가 많은 공원에 부스를 설치하고, 미용실과 식당, 약국 등 상가를 방문하며 안내자료와 홍보 물품을 배포함
    - 구본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시민들이이 어려운 이웃에게 손길을 내미는 수호천사가 돼 주길 기대한다”고 전함
    - 동 관계자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웃지킴이 활동가에게 감사드린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동백1동 맞춤형복지팀)

## 5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신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가구 반찬 지원 사업 확대



\*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류상택)가 지난 12일 '쉐프삼손 동백점'과 '건강밥상 밀반찬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힘

- 사업은 고령, 장애, 만성질환, 한 부모 등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정기적으로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협의체는 지난해 10가구를 대상으로 2개월간 진행
- 올해는 지원 기간과 대상을 늘려 진행, 협약에 따라 쉐프삼손 동백점은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20가구를 대상으로 주 1~2회 반찬을 배달할 예정, 국 1종과 반찬 3~4종으로 구성된 반찬 가방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동에 알릴 방침
- 류상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최근 밥상 물가가 너무 올라 반찬 지원을 원하는 저소득 이웃이 많아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신갈동 맞춤형복지팀)

## 6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동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더블유스타일베이커리에 지역복지협력기관 현판 전달



- \*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3동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곽근배)가 지난 12일 더블유스타일베이커리에 지역 복지 협력 기관 현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힘
  - 협의체는 5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정기 후원하거나 100만원 이상을 일시 기부하는 점포 또는 기관을 지역 복지 협력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더블유스타일베이커리는 동백3동에서 지정된 5번째 지역복지협력기관
  - 더블유스타일 베이커리(대표 박수현)는 지난 6월 말부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지역의 저소득 10여 가구에 정기적으로 빵을 후원하고 있음
    - 박수현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게 맛있는 빵을 후원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기부활동을 이어 나가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전함
    - 곽근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준 더블유스타일베이커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착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업소와 힘을 모아 이웃돕기에 힘쓰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동백3동 맞춤형복지팀)

**7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양지면·영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3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 양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양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과 기흥구 영덕1동은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3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힘
  - 이날 양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역의 약국, 미용실, 음식점 등을 방문해 사각지대 발굴 홍보전단지과 물품을 지역주민에게 배부함
    - 이소영 양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과 해소를 위한 캠페인이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드림 키트와 밀반찬 지원사업 등 다양한 특화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
  - 영덕1동 캠페인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는 주제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
  -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흥덕마을 1단지 주차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관련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전달, 협의체 위원들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할 것을 당부함
    - 이재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관심을 갖고 적극 제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함
    - 동 관계자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양지면, 영덕1동 맞춤형복지팀)

8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용인특례시, 추석 앞두고 어려운 이웃 돕는 따뜻한 손길 이어져**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 단체·공공기업·종교 시설, 민간 단체 등 동참 >



※ 백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동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삼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 용인특례시 곳곳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려는 따뜻한 손길이 줄을 이음
  - 3개 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 단체들을 홀로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명절 선물이나 음식을 전달 하면서 안부를 살핌
  - 공공기관, 종교 시설, 민간 단체 등에서도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려는 온정이 이어짐
  - 처인구 동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안명수)는 위원들이 취약 계층 30가구를 방문해 한과 세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핌
  - 백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신명철)도 위원들이 취약계층 10가구 찾아가 한가위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덕담을 나눔
  - 삼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남상희)도 관내 한부모가정 27가구에 생필품과 부식 거리로 구성된 '한가득 희망 상자'를 전달함
  - 기흥구 상갈동은 홀로 어르신,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 120가구에 명절 음식과 식품 등을 전달, 명절 음식과 식품 등은 주민자치위원회, 하나님의 교회, 기흥장례식장, 카페 마나나 등이 지원함
  - 상갈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임희택)는 위원들이 직접 만든 불고기, 잡채, 오색전 등의 명절 음식 100세트를 지원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된 꾸러미 20박스, 기흥장례식장(대표 정경숙)은 김치 10kg과 음료 100개를 지원, 카페 마나나(대표 김미정)도 단팥빵 100개를 지원함
  - 수지구 성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명희)는 홀로 어르신 등 취약 계층 10가구에 건강식품과 반려 식물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핌, 성북동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 가정 50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명절 지원금을 전달함

- 풍덕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말선)는 취약계층 30가구에 정육 선물 세트를 지원함
  - 상현1동 새마을부녀회는 13~14일 동 행정복지센터 로비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바자회를 열고 미역, 김 등을 판매했다. 행사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
  - 용인 중앙라이온스클럽은 저소득층을 위해 써 달라며 이동읍에 450만원 상당의 돼지갈비 50팩을 전달함
  
  -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는 즉석밥, 국, 김 등의 간편식으로 구성된 생필품 25박스를 보정동에 기탁 했고, 수지에본교회(담임 목사 전광진)는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백미 151포를 풍덕천2동에 기탁
  -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동부지사(지사장 민병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수지구 사회복지과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고, 상이군경회 용인시 지회는 역북동에 50만원 상당의 백미 10kg짜리 15포를 전달함
    -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정을 나눠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역북동, 동부동, 삼가동, 이동읍, 백암면, 보정동, 상갈동, 성북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맞춤형복지팀, 수지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상현1동 행정민원팀)

## 9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죽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1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현주)가 지난 14일 죽전체육공원과 탄천변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17일 밝힘

- 이날 12명의 동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거리로 나와 주민들에게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전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즉시 동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함
- 이번 캠페인은 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 법적으로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립돼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둬
- 이 위원장은 “위기에 놓인 이웃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서서 발굴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제보해 준다면 어려운 이웃이 긴급복지나 무한돌봄 등 복지 지원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를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죽전1동 맞춤형복지팀)

## 10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내 학교 4곳에 여성 위생용품 전달



- \*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8일 지역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4곳에 200만원 상당의 여성 위생용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힘
  - 전달한 위생용품은 지난 7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개최한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과 협의체 기금을 활용해 마련함
    - 이옥배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위생용품을 기부했다”며 “지역 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돕겠다”고 말함
    - 장남수 왕산초등학교장은 “위생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 내 아이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모현읍 맞춤형복지팀)

## 1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보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 \*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준상)가 지난 21일 우리제일교회에서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23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무료로 촬영했다고 22일 밝힘
  - 동은 행복한 노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 촬영을 3년째 이어오고 있음, 사업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재능기부와 우리제일교회(담임 목사 소에스더)의 스튜디오와 장비 지원으로 진행함
  - 협의체는 어르신을 촬영장소로 모시고, 촬영 보조부터 귀가까지 지원, 사진은 액자에 담아 전달할 계획
    - 장수사진 촬영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비용도 부담되고 거동이 불편해 계속 미루기만 했는데, 이렇게 화장까지 예쁘게 해주니 좋다”며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전함
    - 동 관계자는 “이번 장수사진 촬영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보정동 맞춤형복지팀)

1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추석 명절 앞두고 소외된 이웃 돌봄과 나눔의 온기가 확산 중인 용인특례시**

< 용인특례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위해 2억원 특별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 >  
< 지역 내 단체들도 나눔활동 적극 펼쳐...도움 필요한 이웃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명절 의미 되새겨 >



※ 모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죽전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지역 내 단체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네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음
  - 용인특례시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2000가구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지원비’ 총 2억원을 특별지원한다고 24일 밝힘
  -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복지사각지대 등 저소득 가정으로 가구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22일 대상 가구의 계좌로 일괄 입금
  - 기흥구와 수지구에는 이웃돕기 예치금으로 기초수급대상자 등 193가구에 10만원씩 지원했고, 30개 읍·면·동에서는 한 부모 가정,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1688가구에 7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함
    -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 등 185명에게는 특별위로금 740만원을 지원했고,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704명에게는 명절 연휴 기간 총 82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함
  - 처인구 지역의 읍·면·동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청소 활동을 펼치는 환경정화 활동과 지역 내 단체들의 나눔 활동이 이어짐
  - 남사읍에서는 지난 20일 이장협의회와 민간 단체들이 참여해 진위천변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고, 용인중앙라이온스클럽이 100만원의 성금을 남사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 또 남사읍 새마을부녀회는 22일 지역 내 홀몸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식자재로 구성된 추석맞이 선물꾸러미를 전달함
  - 모현읍에서는 지난 20일 새마을부녀회가 홀몸 어르신 100가구에 식자재와 생필품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직접 전달했고, 모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2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 1인당 농촌사랑상품권 15만원을 지원해 추석 차례상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모현읍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함
  - 양지면에서는 용인처인로타리클럽이 지난 19일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고, 역북동은 지난 20일 역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기탁받은 성금을 활용해 지역 내 저소득계층에 추석보양식품 꾸러미 15박스(150만원 상당)를 전달함
  - 유림동은 지난 19일 유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림동행복마을관리소, 유림동자원봉사단과 함께 직접 조리한 명절 음식을 지역 내 어르신 30명에게 전달했고, 지난 20일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추석 명절을 홀로 보내야 하는 소외계층 40가구를 방문해 음식을 전달하는 ‘마음 넉넉 냉장고 빵빵’ 사업을 진행
  - 이동읍사랑회는 지난 20일 지역 내 저소득 가구와 홀몸 어르신을 위해 500여만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했고, 용인중앙라이온스클럽은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23일 송전천 일대 산책로를 청소함
  - 포곡읍에서는 포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용인시 환경주민센터 지원기금을 활용해 지역 내 한부모·다자녀 가정 125가구에 오리고기세트를 지원함, 이와 함께 지역 내 위치한 에버사우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10kg 백미 100포를 기탁, 이 쌀은 지역아동센터 3곳과 장애인보호센터에 전달됨

- 또, 포곡읍 이장협의회아 지역 9개 단체들은 지난 21일 경안천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쓰레기 약 2톤을 수거함
- 기흥구 지역 시민과 단체, 그리고 기업들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함
- 구성동에서는 지난 18일 구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홀로 어르신과 한 부모, 장애인 가구 20곳에 이불세트를 전달했고, 21일 한마음교회는 취약 계층에 햄과 참치통조림 세트 25박스를 전달했다. 22일에는 구성라이온스 클럽이 구성동과 보정동, 마북동에 각각 라면 40박스를 전달함
- 동백1동에서는 지난 19일 동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취약계층 40가구에 식료품 21종으로 구성된 '온정 꾸러미'를 전달했고, 동백2동에서는 지난 18일 새마을부녀회가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회, 동백2동 새마을협의회 의 후원을 받아 준비한 음식 꾸러미를 어려운 이웃 40가구에 전달함, 이어 20일에는 동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선물 세트를 취약계층 50가구에 지원함
- 마북동에서는 지난 20일 지역 소재 현대자동차(주) 마북연구소와 현대모비스(주) 용인마북기술연구소가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450만원 상당을 마북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고, 보라동에서는 (주)피제이피테크가 지난 19일 500만원 상당의 어르신 보행 보조기 20대를 보라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함
- 보정동에서는 22일 구성라이온스클럽이 추석을 앞두고 보정동행정복지센터에 라면 40박스를 기탁했고, 서농동에서는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9일 어려운 이웃 30가구에 참기름 선물 세트를 전달함
- 상갈동에서는 상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9일 지역 내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친 데 이어 20일에는 홀로 어르신 20가구를 방문해 추석 먹거리 꾸러미를 전달함
- 신갈동에서는 신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8일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했고, 신갈로타리클럽은 신갈동 행정 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160만원을 기탁함
- 이와 함께 영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저소득 가구 30곳에 1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 세트를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함
- 수지구에서도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의 온기가 확산하고 있음, 지난 21일 이형범 수지구청장은 지역 내 '해오름의 집'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필품과 과일을 전달함
- 동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돕는 '풍성한 고기세트와 함께! 웃음 가득한 한가위' 사업을 진행해 20가구에 소고기 세트를 전달함
- 상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복지취약계층 20가구에 참치소금 세트를 선물하고, 명절 인사를 전함

- 죽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저소득 홀로 어르신 30가구에 과일과 고기 곰탕, 유과로 구성된 추석 꾸러미, 한 부모 가정 16곳에는 식품을 교환할 수 있는 10만원권 쿠폰을 지원함
  - 이와 함께 풍덕천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 홀로 어르신 14가구에 명절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 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뜻깊은 활동을 진행함
    -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복지정책과 나눔복지팀/모현읍, 양지면, 역북동, 유림동, 이동읍, 중앙동, 포곡읍,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 마북동, 보라동, 보정동, 상갈동, 서농동, 신갈동, 영덕2동, 동천동, 상현1동, 죽전1동, 풍덕천2동 맞춤형복지팀/수지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남사읍 산업팀/풍덕천2동 행정민원팀)

##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 1 중앙정부 복지현안

####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치매 환자 실종 예방 강화

< 치매 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제공 서비스 적극 안내 >



- \*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대여 등 치매환자들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보호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배회·실종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지문 등 사전 등록, ▲민간기업(SK하이닉스) 협력 ‘행복 GPS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치매체크앱(배회감지 서비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옷 등에 부착하는 형태의 표식으로, 누구든지 배회하는 치매환자를 발견했을 때 치매환자의 옷에 부착된 인식표를 보고 신속하게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은 인식표에 기재된 정보(치매환자 고유 번호)로 치매환자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음
    - 또한,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경찰청에 등록하면 치매환자 실종 시 경찰이 보다 신속하게 치매환자 정보를 확인하여 귀가를 도울 수 있음
    - 등록 신청: 치매안심센터, 경찰서,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
  - 보호자가 치매환자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배회감지기는 개인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도 있으나, 구입이 곤란한 경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 대상: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시설급여 이용시 사용 불가)
  - 기간·방식: 5년(1대), 대여만 가능

- 비용: 월 880원~5,325원 대여료 납부(자격·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0%~15%),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 절차: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제품 선택·계약
- SK하이닉스에서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조성한 행복나눔기금 주요 사업으로 치매노인 및 발달장애인 실종 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를 2017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행복 GPS 사업)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치매안심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음
- \* 2021년에 행복 GPS 사업에서 무상 제공한 배회감지기는 지난 8월 말 2년의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10월부터는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제품으로 배회감지기가 보급될 예정, 다만 제품 단가 인상으로 보급 물량이 줄어 2021년 SK하이닉스에서 제공한 배회감지기를 이용했던 분들 모두가 새로운 제품의 배회감지기를 지원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상 보급 배회감지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효과성이 높은 배회 감지기가 필요한 치매환자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하고, 치매체크앱 등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2일 시도에 협조를 요청함, 이는 효과성 높은 실종 예방 방법 이용 제고, 행복 GPS 사업 물량 감소 등을 감안한 것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 2 중앙정부 복지현안

### 미래 사회보장 대응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 열려

<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간 협력체계 구축 >

- \* 보건복지부는 9월 7일(목) 오후 12시 30분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호텔에서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사회보장체계의 재구조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함
  - 이번 정책 포럼은 사회보장위원회 출범(2013년)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석재은 민간위원 실무위원장을 비롯하여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김수완(강남대, 기획), 이상은(숭실대, 제도조정), 박노옥(한국조세연구원, 평가), 김태일(고려대, 재정),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도통합),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행정데이터)
- \* 전문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위원회 간의 벽을 허물고 사회보장의 주요 이슈를 상호공유하고 사회보장 관련 최상위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통합적 논의를 시작함
  - 이날 포럼의 주제는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으로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와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 후 포럼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됨
  - 이철희 교수는 한국의 장래 인구변화에 따라 초래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추정결과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고, 양재진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복지국가의 출현가능성과 한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주는 함의를 발표함
  - 이어진 토론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과 한국의 특수한 환경에 맞춰 중장기적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필요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짐

※ 보도자료 참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 3 중앙정부 복지현안

#### 사각지대 발굴 위해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등 연계 강화

<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필요한 지원 강화 >

- \* 보건복지부는 전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사망 사건(23년 9월 8일)과 관련해 9월 12일(화)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사각지대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함
  - ①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②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③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3개 분야 12개 과제 추진 중
    - 이번 사례와 같이 해당 가구가 중앙의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으나,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같은 상세 주소의 미비로 위기가구 상담을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함
    - 위기가구의 정확한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23.5) 하였으며, 금년 중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 또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여 해당 정보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
    -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생계, 의료급여 등 필요한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함, 아울러 향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상담 조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정위탁, 입양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와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 할 예정
      -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복지정보기획과, 아동복지정책과)

## 4 증양정부 복지현안

### 위기가구 발굴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 정확한 다가구주택 동호수 정보 연계 방안 등 논의 >

< 9월 18일부터 제5차 사각지대 발굴조사 실시 >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보유 아동 691명 소재·안전 확인, 7명 수사 중 >

- \*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함
  -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및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위기가구발굴지원팀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 등이 참여함
  - 회의를 계기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고, 위기정보 제공기관들이 보유한 상세주소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안들을 관계부처가 함께 지속 협의하기로 함
- \* 9월 18일부터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실시
  - 한편, 9월 18일(월)부터 올해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될 예정,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는 중앙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약 16만 명 규모\*의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며 여기에 지자체가 자체 발굴 대상을 추가하여 조사가 이루어짐
  - 특히 이번에는 추석 명절 전후 실업이나 채무로 어려울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 대상에 추가하여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격월 주기로 진행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실업 3개월 이상 금융연체자, 최근 금융연체 건수 증가 대상 등)
-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등 확인 조사 결과
  - 그간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15~'23.5월 출생) 전수조사,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조사 등을 통해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추가 조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함
  -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23.7.6일 기준)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 710명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조사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15~'23.5월 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을 확인하였으나 수사의뢰하지 않은 사망 아동(228명)에 대해 확인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힘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의 경우, 성인 및 중복 보유자 12명을 제외한 조사 대상 아동 698명 중 ▲소재와 안전이 파악된 아동은 684명이며, ▲해외 출국 상태인 아동 7명,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소재 파악중인 아동은 7명이다. 소재가 확인된 아동 중 250명은 시설 입소, 434명은 가정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임시신생아번호 사망 아동의 경우, 총 228명 중 과거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4명을 제외한 224명에 대해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형제·자매의 사망 여부,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 추가 확인을 실시,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 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음

**참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 추진 경과**

-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빅데이터기반 발굴시스템 구축('15.12~)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입수정보 확대, 발굴 모형 개선을 추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을 지속 증가
  - (지원대상) ('15년) 1.8만명 → ('17년) 7.6만명 → ('19년) 22.8만명 → ('21년) 66.3만명 → ('22년) 60.6만명
  - (지원율) ('15년) 16% → ('17년) 25.7% → ('19년) 36.0% → ('21년) 49.5% → ('22년) 50.2%

**\* 발굴 시스템 개요**

- (절차) 매 2개월마다 단전·단수 등 약 18개 기관의 39종 위기정보를 입수·빅데이터 분석 → 약 700만명의 정보수집 대상자 중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약 15만명을 선별, 지자체에 통보(연 6회)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방문, 전화 등)한 뒤, 필요한 서비스 지원
- (발굴·지원 결과) 발굴시스템 구축 이후('15년~'22.12월) 526.7만명을 조사하여 221.5만명(42.1%)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 향후 계획**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근거를 既 마련하였으며, 시스템 개편을 통해 질병, 채무 등 위기정보를 확대(39종→44종) 연계
  - ①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② 수도요금체납 ③ 가스요금체납, ④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⑤ 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 통·이장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역 기반의 발굴체계 강화 추진
    - ※ 보도자료 참조(지역복지과 복지정보기획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학대대응과)

## 5 중앙정부 복지현안

###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등 추가 혜택 >

- \*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화)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함
- \*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
  -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
    - 우리나라 빈곤율: ('11) 18.6% → ('16) 17.6% → ('18) 16.7% → ('21) 15.1%
    - 또한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적극 개선이 필요함
    - '18년 빈곤갭: 우리나라 34.2%, OECD 평균 30.2%
  -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21년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
    -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보건사회연구원, '23년)
  - 이러한 배경에서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가구별 소득수준 및 수요 등에 따른 보호체계를 구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제1차('18~'20)·제2차('21~'23)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재산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현재 약 25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중

\*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1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 (생계급여)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 소득의 30%→32%'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

<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A씨는 월 62만 원의 기초생활 생계비가 소득의 전부이며, 생계비가 조금만 더 지원된다면 식사준비와 병원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  
 ▲ (개선)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지급액)이 1인 가구 기준 71만 원까지 인상되어 월 9만 원의 생계급여 추가 수급 가능

- (의료급여)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B씨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어 집에 돌아갈 경우 생활이 막막한 상황  
 ▲ (개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B씨도 집에서 맞춤형 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돌봄, 식사, 병원이동 등 서비스 가능

-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의 역할 기능을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을 개선
- 수급권자 수, 질환 정도, 건강관리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한 업무분석 연구 추진('24)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함
- 또한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

<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기준	변동	기준	변동	기준	변동	기준	변동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0	50.7	+2.5	40.6	+2.4	34.0	+2.7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C씨는 주택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크고 작은 침수피해를 경험

↓

▲ (개선) C씨 주택은 수선유지급여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으로 선정 가능하며, 기존 도배·장판 등 수선공사 외 침수방지를 위한 필수시설 4종 추가로 설치

- (교육급여)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비교표 >

(단위: 만원)

구분	최저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 (B)	B/A	'22 (C)	C/A	'23 (D)	D/A	'24 (E)	E/A
초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중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고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학부모 D씨는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급여를 수급 중이나, 현재 교육급여로는 자녀들이 원하는 교육활동 지원 어려움

↓

▲ (개선) '24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인 초등 46만1천 원, 중등 65만4천원으로 인상되어 총 111만5천원 수급, 자녀들이 원하는 교육활동 지원 가능할 것으로 기대

2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는 '24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조정,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등록 중증장애인인 E씨 가구(2인)의 월 소득은 120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버지 F씨의 월 소득이 290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  
 ↓  
 ▲ (개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라 '24년부터 아버지 F씨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E씨는 의료급여 수급 가능

- 생계급여의 경우 '21.10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
- (재산기준 완화)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에 대하여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2,000cc 미만)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23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50%만 재산으로 산정 중이나,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I씨의 SM5(1,998cc, 1,000만원)는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133만원) 생계급여 탈락  
 ↓  
 ▲ (개선) '24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133만원으로 감소, 약 5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J씨는 월 180만원의 수입이 있으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보유하고 있는 카니발(2011년식, 600만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726만원) 생계급여 탈락  
 ↓  
 ▲ (개선) '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51만원으로 감소, 약 63만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 또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1,600cc 미만)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

	현행	개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일반자동차 중 월 4.17% 적용 자동차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배기량 기준 등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  * (예시)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등
일반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소득환산율 적정 수준으로 인하

- 주거용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
-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4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임대주택(임대료 월 2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3인 가구 K씨의 소득인정액은 월 220만원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208만원을 초과하여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

↓

△ (개선) '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되어(3인 가구 월 226만원) K씨도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임차료 월 20만원 지원 가능

- (긴급복지 지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금을 인상
- 생계지원금 인상: (1인) ('23) 623,300원 → ('24) 713,100원, (4인) ('23) 1,620,200원 → ('24) 1,833,500원

**3**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 (근로유인 강화)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27세 L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으나, 근로소득 공제를 30%를 적용하더라도 '23년 1인가구 선정기준 62만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  
↓  
▲ (개선) '24년부터 30세 미만 청년까지 근로소득 추가공제(4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므로 소득 인정액이 56만원으로 감소, 약 15만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 또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서적 자활 지표)'를 시범 운영
- 참여자의 정서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21년 개발, ①자활의지(자존감, 동기, 기술, 목표), ②근로장벽, ③자활행동(일상생활, 근로, 사회적 관계 등) 영역으로 구성
-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맞춰 자활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모델 및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
-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성숙단계 등 단계별로 자활기업 창업·경영 내실화를 지원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24세 조건부 수급자 M씨는 지속된 빈곤으로 의욕이 낮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자활역량이 높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되었으나 취업에 실패  
↓  
▲ (개선) 신규 구축된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해 맞춤형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신용회복서비스 및 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 받게 되었으며, 청년자립지원 사업단을 통해 자활기업에서 인턴근무 가능

-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층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
-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 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N씨는 만기수령금 재투자료 목돈을 마련하고 싶어 하고 평소 금융·자산 교육에 관심이 많으나, 학업·근로 병행으로 해당 분야 학습을 주저하고 있으며 학습과 관련된 정보도 부족한 상황  
 ↓  
 ▲ (개선) '25년부터 자산형성포털을 활용해 청년층 수요가 많은 맞춤형 금융, 자산 교육 등 양질의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전문가에게 재무상담도 가능

**4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 (제도 관리 내실화)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
  -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다빈도 위주로 연장승인제도를 개편
    - 실제 진료비 지출 및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수준을 현실화 하고, 의료적 필요도가 낮음에도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입원 연장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 정착)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바우처 신청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수급자의 편리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
  -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인프라별 기능 고도화 및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자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
-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지원과, 기초의료보장과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6 중앙정부 복지현안

###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의 지친 삶을 보듬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준비합니다

- < 복지부, 청년의 의견을 직접 듣고 마련한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
- < '24년 청년 복지 5대 과제 예산 약 3,309억 원 편성('23년 예산 대비 43% 증가) >
-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대상 정부 최초 원스톱 통합지원사업 시범 시행 >
- ①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 원) 지급, 돌봄코디네이터 밀착 사례관리
- ② (고립·은둔청년) 개인 사례별 종합 평가 거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③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월 40→50만 원), 민간 협력(멘토링, 장학금 등) 강화
- ④ (마음건강지원) 심리지원 확대,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검진주기 단축, 항목 추가)
- ⑤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청년 기초수급 소득공제 확대

- \*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안정,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 5대 과제」가 마련됨,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한 5대 과제를 확정·발표
  - 이번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최근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지원책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건강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
  - 우선, 소위 ‘영 케어러(Young Carer)’로도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 또한 자조모임에도 참여하여 다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도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24년부터 4개 시·도에 전담 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인력(돌봄 코디네이터, 센터당 6명)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힘, 한편 올 8월부터 시작된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서비스는 내년에 더 많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음
  - 둘째,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복귀·재적용을 원하는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태에 따라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같은 은둔청년들과 공동 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 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이 또한 '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24년부터 4개 시·도에 전담 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인력(센터당 8명)을 두고, 시범사업에 들어감

- 셋째, 자립준비청년들이 기존에 받던 지원들도 더욱 늘어남, 매월 40만 원씩 받는 자립수당이 내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맞춤형 사례관리(주거·의료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를 받고, 더 많은 전담인력('23년 180명 → '24년 230명)을 통해 질 높은 일대일 관리 서비스도 받게 됨, 그 밖에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제공하는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도 경험 가능
  - 넷째, 청년들이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대폭 확대, 그간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온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확대하여,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24년, 청년층 포함 8만 명)을 통해 더 많은 심리상담 서비스의 기회가 제공, 청년들은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도 강화, 이르면 '25년부터 청년들이 더 많은 정신질환(조현병·조울증 추가)에 대해서 더 자주(10년 → 2년 주기) 검진받을 수 있음
  - 다섯째,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 소득공제 나이 범위도 확대(24세 이하 → 30세 미만)되어 많은 저소득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4년 약 3,309억 원의 예산 편성,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이다. 내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

※ 보도자료 참조(인구정책총괄과 청년정책팀)

### 3. 통계로 보는 복지

#### 1 증양 통계현안

#### 2023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